‘ 선택과 집중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절실하다

- 성장동력부재의시대, 재정정책기조적정한가-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우리 경제의 향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8·31 종합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한재고거래시장이가격하락과거래중단으로 급랭하고 있다. 또한, 이는 신규 분양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조만간부동산시장전체가전면적으로휴면상태에이를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신규주택의 공급지연으로이어질경우, 향후2 3년이후에는주택난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내수경기를지탱하는데기여해온건설 경기의경착륙이불가피한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내수경기를견인할수있는동인을찾기어려운현재의상황은 금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년도전망마저더욱어둡게만들고있다.

물론, 현정부가들어선 이후 경기 회복의 부진은 결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록 3/4분기에접어들면서소비실적의소폭 개선이 설비 투자와 산업 생산으로 이어질조짐을보이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0.25% 포인트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경기회복은아직기대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내수 부진이 여전하고, 연초부터 심화된 유가 상승의부담이이제는물가상승으로이어져 실물경제에악재로작용하는것이가시화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정부의 정책 기조는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지향하고있다. 이는경제성장보다는소득분배를 통한복지향상을중요시하는현정부의정책기조에근간을두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책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선택과 집중이 절실하게요구되는지금의경제상황에과연 적합한정책인지는의문스럽다.

재정 운용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2006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의결되었다. 또한, 정부는국가 재정 운용 계획안(2005 09년)과 2005년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달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먼저, 내년한해동안의나라살림에필요한정부지출의 총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하여 금년에 비하여6.5% 증가한221조 4,000억원수준으로, 그리고 금년 하반기의 추경 예산은5조 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또한, 2009년에이르는기간을대상으로한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하면, 연평균6.3%의증가율을 기록하여 2009년의 총지출 규모는 266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전망은계획기간동안의실질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수준인연평균5% 내외가유지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일련의재정운용방안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연2009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연평균5% 수준을유지할것인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먼저, 한국은행의추정에의하면, 1991년부터2004년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의기간별잠재성장률은 평균적으로하향추세를 지속하고있다. 특히, 1997년말에발생한외환위기의영향을 감안하더라도, 2001년이후의 연평균 잠재

2006년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

(단위: 조원, %)

구 분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1. 사회복지·보건	49.3	54.7	5.4	10.8
2. 교육	27.6	29.1	1.5	5.1
3. 수송·교통·수자원	18.3	17.8	△ 0.5	△ 2.7
4. 농림·해양수산(농어촌투융자)	14.1 (10.8)	14.4 (11.4)	0.3 (0.6)	2.0 (5.6)
5. 산업·중소기업	11.9	12.4	0.5	4.5
6. 환경보호	3.6	3.8	0.2	6.4
7. 문화·관광	2.6	2.9	0.3	9.8
8. 국방(일반회계)	20.8	22.9	2.1	9.8
9. 공공질서안전·통일·외교	11.4	13.0	1.6	13.8
10. R&D	7.8	9.0	1.2	15.0
11. 국가균형발전	5.5	5.9	0.4	8.4

주: 분야별재원배분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순계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5. 9. 27.

성장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을구성하고있는요인별기여도측면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잠재 성장률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가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점또한주목할 필요성이있다. 즉, 이는무엇보다도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으로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의 풍부한 자본이 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정부 정책의기조는 풍부한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야할것이다.

재정 운용 정책 기조는 적정한가

그렇다면, 향후의 정부 지출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자본의 적정한 투자처를 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고 있는가에대한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2005년하반기의 추경 예산액 5조 1,000억원은 4조 1,000억원 규모의적자국채발행을 근간으로편성되어있고, 이는 세입 부족분 4조 2,000억원을 보전하는 한편연내에집행이시급한지출소요 9,000억원을 충당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경기침체에따른세수부족분을국가채무로충당하는한편, 세수부족을야기한경기침체를극복할수 있는실물부문보다는 복지 부문에 추경 예산을 집행할방침이다. 경기회복을위한동인, 즉적정한투자처가 부재한상황에서, 이와같은정책기조는아무리생각해도현안해결을위한정책방안의앞뒤가전도된것으로밖에이해되지않는다.

뿐만아니라, 2006년의재정운용방안또한 경기회복을 위한 동인을구하기는 어려울것으로보인다. 부문별 증가율이 6.5%의 평균증가율을상회하는부문이경기회복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사회 복지 · 보건(10.8%), 환경 보호(6.4%), 문화 · 관광(9.8%), 일반회계 기준의 국방(9.8%), 공공질서 · 안전 및 통일 · 외교(13.8%), 그리고 R&D(15.0%), 국가균형발전(8.4%) 등이다. 즉, 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수송 · 교통 · 수자원등사회간접자본부문은오히려 2.7% 감소하였고, 산업 · 중소기업부문의 증가율은 4.5%에머물렀다. 즉, 현정부가지향하고 있는 소득 분배를 통한 복지 정책이 확연하게 반영되었는데, 이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적합한것인가는여전히의문스럽다.

2005 09년의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

(단위: 조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1. 사회복지 · 보건	49.6	54.7	59.6	64.1	70.5	9.2
2. 교육	27.6	29.1	31.1	33.8	36.3	7.1
3. 수송 · 교통 · 수자원	18.3	17.8	17.8	18.2	19.2	1.3
4. 농림 · 해양수산	14.1	14.4	14.7	15.2	15.8	2.8
5. 산업 · 중소기업	11.9	12.4	12.6	13.0	13.4	3.0
6. 환경보호	3.6	3.8	4.0	4.4	4.9	7.7
7. 문화 · 관광	2.6	2.9	3.0	3.2	3.3	6.0
8. 국방(일반회계)	21.1	22.9	24.9	27.3	30.0	9.1
9. 공공질서 · 안전 · 통일 · 외교	11.4	13.0	13.6	14.0	14.4	6.1
10. R&D	7.8	9.0	9.6	10.3	11.1	9.2
11. 국가균형발전	5.5	5.9	6.7	7.1	7.8	9.1

주: 2005년은추경예산(안) 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5. 9. 27.

그렇다면, 2006년이후의재정운용방안은과연경기회복의동인과경제성장의동력을확충하는데맞추어져있는가? 이에대한해답또한 매우회의적인것으로판단된다. 즉, 연평균증가율6.3%에대비하여,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불과하고, 농림 · 해양수산 부문과 산업 · 중소기업 부문은 각각 2.8%와 3.0%에 머물렀다. 따라서정부의재정운용 기조는 향후 2009년에이르기까지 경기회복의 근간을이루는실물부문에대한재정운용비중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것이다.

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은

물론, 지금까지의 경제 발자취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경제정책기조가이제는 경제성장지향의양적성장정책에서복지 수준향상의 질적성장정책으로 전환할시점에이른것은자명하다. 경제규모측면에서 세계 9위라는 순위에 비하여 빈약한 복지 수준은 사실상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질문을부끄럽게 만든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우리의경제상황은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의 국면에서 탈피하는 정책이 시급하게요구되는상황이다.

더욱이 경기 회복을 견인할 만한 동인이 없고, 경제성장의동력이부재한상황에서, 정부정책의기조는그어느때보다‘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기초하여 효율적인 재원 집행의정책을유지할때이다. 특히, 효율적인 재원집행의정책목표는단기적으로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한 침체된 실물경기의회복과이를바탕으로한세수확대등추가재원의마련, 그리고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기반의구축과복지수준의 개선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현정부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할것이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sjwang@cerik.re.kr